

국제무역체제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고찰

崔炳善*

<目 次>

- | | |
|---------------------|-----------------------|
| I. 서 론 | III. 자유주의 전통과 신자유주의 제 |
| II. 현실주의 전통과 폐권안정이론 | 도론 |
| | IV. 맑시즘 전통과 세계체제이론 |

〈요약〉

이 글은 국제무역체제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무역체제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는 크게 현실주의의 이론, 자유주의의 이론, 맑시스적 이론으로 대분류할 수 있는 바, 이 글에서는 각각의 이론적 전통의 발전과정, 그것의 기본전제와 주요 내용, 각 이론에 대한 논란과 비판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글은 체제수준(system-level)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추상성이 높긴 하나, 오늘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속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국간주의 등이 혼재하고, 국가간 무역마찰이 계속되는 등 국제무역체제의 안정성이 채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로와 귀결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국제무역체제의 변화 방향과 양상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길잡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 서 론

국제정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는 역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다. 여기서 국제협력이라 함은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여러 국가가 정책상의 차이를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것”(Keohane, 1984: 12, 51-5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을 의미한다. 국제협력 문제는 국제정치경제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즉 시장(경제, 부)과 국가(정치, 권위)라는 핵심적인 두가지의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 원리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¹⁾ 더 깊게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철학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국제관계에서 무역, 금융, 해외투자의 형태로 표출되는 시장의 힘(market forces)은 흔히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를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정부(국가)는 시장이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또는 그 국가내의 강력한 사회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channel)하려는 경향을 보인다(Heilbroner, 1985: 94-95). 이처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시장과 국가라는 두가지 사회조직 원리가 어떻게 경제사회 활동을 규율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정치 경제학 연구의 핵심이었다. 근대초기의 David Hume, Adam Smith, Alexander Hamilton, Immanuel Kant, 19세기의 David Ricardo, John Stuart Mill, Karl Marx 등은 거쳐 오늘날의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과 국가(정치)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은 크게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그리고 맑스주의(Marxism)라는 세가지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각각은 그 자체로 방대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기본가정들에 입각해 있고, 연구목적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두가지의 차원 또는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 본장에서는 이 세가지 사상과 이론의 전통 및 핵심내용을 개관하고, 이들 이론을 대표하는 패권안정이론, 신자유주의적 제도론, 세계체제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현실주의 계통의 패권안정이론과 자유주의 계통의 신제도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은 적어도 19세기 아래의 국제무역체제의 변동과 그 원인을 탐구하는 데 있어 매

1) 시장과 정부(권위)는 사회조직의 두가지 기본원리이다(Lindblom, 1977). 이것 은 사회의 모든 일들이 시장과 정부라는 두가지 기본원리의 서로 다른 배합(mix)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민주사회에서 결혼이나 직업선택은 거의 전적으로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시장의 원리와 정부의 원리가 혼재하는 영역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정부의 권위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조직되고 운영되지만, 그 속에서도 기초적인 사회활동은 상당부분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우 유용한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패권안정이론의 적실성(relevance)을 둘러싸고 가열되었던 양 이론간의 치열한 논쟁은 매우 유용한 분석개념들의 발전을 자극하였고, 이런 개념들에 기초한 새로운 분석틀의 등장은 대단히 복잡한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와 성격, 그것의 작동메카니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²⁾ 아울러 이 글에서 검토하는 여러 이론과 분석개념들은 국제무역체제의 역사적 형성 및 변천과정을 다루는 데 매우 유용한 안목과 시각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한편 세계체제론은 앞서의 두가지 이론과는 철학적 기초나 기본적인 문제의식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세계체제론은 아직 개념의 완숙성이나 경험적 연구면에서 앞서의 두가지 흐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미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오늘날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 거시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더구나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체제론은 자본주의의 지구적 발전양상이 어떠할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귀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Ⅱ. 현실주의 전통과 패권안정이론

1. 현실주의

권력 또는 힘(power)이라는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보는 현실주의 전통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간의 관계를 기술한 투키디데스(Thucydides) 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Carr, 1964; Morgenthau, 1973; Aaron, 1973; Waltz, 1959; Gilpin, 1975, 1982).³⁾ Niccolo Machiavelli, Thomas Hobbes를 거쳐 20세기에

2) 물론 이 이론들이 어디까지나 강대국 중심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현실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국제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eohane 스스로 자유주의 이론의 적용에 지역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평화의 지역(zone of peace)'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진국간의 관계에 주로 적용되는 반면, '갈등의 지역(zone of conflict)'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외의 지역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Keohane, 1993).

3) 현실주의는 대체적으로 인간본성에 대한 비관적 견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Hobbes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존재, 이득과 영광

이르러 E. H. Carr, Hans Morgenthau, Raymond Aaron 등 고전적 현실주의자들과 Kenneth Waltz, Robert Gilpin, Stephen Krasner 등과 같은 신현실주의자들(neo-realists)에 이르는 무수한 학자들이 현실주의 전통에 서 있으며, 이들의 연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연구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물론 현실주의 계보 내에 서도 이들은 제각기 다른 이론체계를 선보였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1) 국제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시장보다는)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2)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생존과 안보를 위해 힘(power)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런 힘의 추구의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규정한다.

(3) 국가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unitary-rational agent)로서 비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⁴⁾

(4) 이런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치체(centralized authority)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anarchy) 상태에 있다. 국가는 이러한 무정부성을 전제로 국제관계에 대한 국가선호(national preferences)를 형성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한다.

이러한 기본가정들에 입각하여 현실주의자들은 국제협력에 관한 두가지 중요한 명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1) 국가는 국가안보와 힘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간에 분쟁(conflict)과 경쟁(competition)이 야기되며, 공동이익(common interests)을 놓고도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s)는 국제협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Grieco, 1990: 3-4).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대표

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시장)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개인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해 주지 못하므로 국가에 무한정의 권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현실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를 연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여기서 ‘단일한’이란 국가내부의 다양한 사회세력, 계급, 개인을 무시하고 국가를 통합된 단일체(unit)로 상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합리적인 행위자’는 국가가 선택가능한 행동의 한계비용과 편익을 매우 조심스럽게 계산하여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을 극대화하려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적 학자인 Morgenthau(1946, 201-02)는 모든 정치과정에서 권력의 우선성(prima-cy of power)을 확인하고, 이에 입각하여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정치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에게 있어 국제정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간의 정치는 국가간의 권력투쟁이고, 이 권력은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interests)의 다른 표현이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 이슈에 어떤 서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환경·문화 등 비군사적 분야를 “하위정치(low politics)”로 치부하고, 군사·안보·전략 등 “상위정치(high politics)”에 속하는 이슈들을 중시하였다.

한편 Waltz(1959: 159-186)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기본전제들, 즉 권력중심성의 논지, 국가중심적 논의, 개별 행동단위들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 등을 공유하면서 현실주의를 재해석하였다. 그는 개별국가의 성격이나 동기로 환원될 수 없는 원인들이 집합적으로 개별 행동단위들간에 상호작용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행위자의 의도와 결과가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구조(structure)와 상호작용하는 단위(unit)로서의 국가들로 구성되는 체제(system)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나 정책결정자의 의도,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단위수준(unit-level)’에서 국제정치 현상을 바라보던 현실주의의 환원론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국제체제의 구조적 성격을 찾아내고 이것이 어떻게 개별단위인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체제차원(system-level)’의 이론을 구성하였다.⁵⁾

2. 신현실주의와 패권안정이론

1970년대초 국제정치 현실이 크게 변화하자 상위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은 중대한 도전에 처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국제정치경제상 변화는 한마디로 다원화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미·소간의 데탕트 분위기, 中蘇분쟁으로 인한 공산진영의 분열, 이 속에서의 제3세계국가들의 상대적 지위 상승 등 국제정치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국제무역질서는 신보호주의(new protectionism)로 흐르고, 국제통화질서면에서는 Bretton Woods의 고정환율체제가 붕괴되면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경제 그리고 일본경제의 급성장으로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은 저하되었다.

5) 이 점에서 그는 현실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며 모젠소의 ‘고전적’ 현실주의와 구별하여 ‘구조적’ 현실주의 또는 ‘신현실주의’라 부른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미국의 국제정치학계, 특히 현실주의적 계통의 학자들은 미국의 국제경제에서의 상대적인 위상저하와 국제경제질서의 동요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또한 미국의 상대적 위상이 이와같이 약화됨으로써 미국이 국제경제질서를 더 이상 주도하지 못하게 될 때 국제경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천착하기 시작하였다(윤영관, 1996: 95; Snidal, 1985: 580; Strange, 1987: 555).

이런 일단의 문제의식을 가진 학자들을 흔히 신현실주의(neo-realism) 학자군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신현실주의적 연구에 불을 당긴 사람이 바로 저명한 국제경제학자인 Charles P. Kindleberger였다. 그는 세계대공황에 대한 기념비적 저작,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은행가들의 잘못을 강조한 Friedman이나 Galbraith등과는 달리, 국제경제체제에 있어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패권국(hegemonic state)의 부재가 대공황의 장기화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국제경제체제에는 무역, 외환, 금융 등 세가지 측면에서 국제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를 제공할 지도국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러한 능력은 가지고 있었으나 용의가 없었고(able but unwilling), 영국은 용의는 있었으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willing but unable) 고 본 것이다.⁶⁾

좀더 구체적으로 Kindleberger는 ‘국제경제체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재는 비이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패권국이 존재하고 그 패권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다음의 다섯가지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 289).

- (1) 자국시장을 상대적으로 넓게 개방하여 타국의 잉여생산물(distress goods)을 흡수하는 것.
- (2) 각국의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역주기적(counter-cyclical)이고 안정적인 장기대출을 제공하는 것.
- (3)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율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각국을 감시하는 것,
- (4) 거시경제정책의 국제적 조정을 확보하는 것.
- (5) 금융위기 상황에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타국은행 발행어

6) Keohane and Nye (1977: 44)는 패권이란 “하나의 국가가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 규칙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럴 용의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음을 할인(discounting)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연합을 통해서도 공급가능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각국의 속임수(cheating) 및 무임승차(free-ride) 유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은 내재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Kindleberger의 논리다.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그는 국제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을 뿐, 국제체제(regime)의 형성이나 자유무역체제의 등장 및 쇠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자유주의적인 국제경제질서가 자국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강력한 패권국이 존재하고, 이 패권국이 이를 지지할 때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체제는 유지·발전되게 되며, 패권국의 쇠퇴는 불안정적이고 폐쇄적이며 보호무역적인 국제경제질서를 초래하고 국제무역 및 통화레짐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명제(pp. 288-305)를 제시함으로써 패권안정이론(theory of hegemonic stability)의 시발점을 제공하였다.⁷⁾

더 나아가 Kindleberger의 주장은 고전적 현실주의가 극단적인 비관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국제관계가 지니는 무정부적 속성을 강조하고, 영합게임(zero-sum game)적 성격을 지닌 국제관계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는 고전적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Grieco, 1990: 40-49), 패권국이 존재할 때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⁸⁾ 신현실주의를 대표하는 Robert Gilpin(1971)과 Stephen Krasner(1976)는, Kindleberger의 이론을 확장하고 수정하여, 19세기와 20세기의 개방적인 무역체제의 등장과 쇠퇴를 패권국의 존재와 연결시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Stein, 1984: 356-57).

먼저 Gilpin(1981)은 패권국가는 우월한 경제적 효율성(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무역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월등한 정치적·군사적 힘에 의존하여 다른 국가들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제하고 유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⁹⁾ 그는 Pax Romana가 그랬던

7) Kindleberger의 주장에 ‘패권안정이론’이란 이름을 붙인 학자는 Keohane이다 (Greico, 1993).

8) Kindleberger는 패권국가가 자유무역체제를 창출해 내는 것은 상당부분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나, 이후의 패권안정이론가들은 패권국가의 사익적 동기를 강조한다.

9) Gilpin(1981: 106)은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관점에서 국가는 기존의 국

것처럼, 영국과 미국 패권하의 *Pax Britannica*나 *Pax Americana*가 다른 어느 시대 보다도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체제를 보장하였던 것은 패권국이 개방적인 국제무역질서를 창안하고 유지시켜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p. 144). 좀더 구체적인 예로서 그는 19세기 영국의 막대한 해외투자는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과 해상로의 확보,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런던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 등 유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급속한 팽창도 미국의 해군사력, 국제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 기술발전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

한편 Krasner(1976)는 특정한 국제경제구조 속에서 국가이익(state interests)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뒤, 자유무역이 패권국가에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임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는 먼저 1970년대초 다국적기업의 급성장과 함께 성시를 이룬 상호의존성 이론들이 국제관계의 분석단위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무시함으로써 국제정치경제현실에 대한 이해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¹⁰⁾ 국제무역구조의 특성(개방성, 상호의존성 등)은 궁극적으로 국가이익과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국가간에 잠재적 경제력이 패권적 분포(hegemonic distribution)를 보일 때 국제무역구조는 개방성을 띠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¹¹⁾

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한계비용과 편익이 같아지는 선까지 체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아무리 패권국이라 할지라도 무한정하게 영토, 국제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확장을 피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10) 1970년대 초반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향의 연구들 (Cooper, 1972; Keohane and Nye, 1972)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경제간 상호의존성의 증대 및 초국가적 관계(transnational relationship)의 심화는 이제 국가들이 위신(prestige)보다는 복지(welfare)를 더 중시하게 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계정치를 변형시키고 있으며, 국가중심적인 이론(state-centric theories)과 현실주의적인 접근방법의 적설성(relevance)과 유용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11) 패권국의 지위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Krasner는 패권국과 바로 그 뒤를 쫓고 있는 제2국간의 격차에 주목한다. Bairoch(1993: 20)에 의하면, 1800년 유럽 인구의 약 8-10%에 불과했던 패권국 영국은 유럽전체의 銑鐵(pig iron) 생산량의 29%를 차지하였고, 1830년 이 비중은 45%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일인당 산업생산수준(per capita level of industrial production)은 유럽전체(영국은 제외)의 110%에서 250%로 급증하였다. 한편 Krasner(1976: 333-34)에 의하면, 1860년 영국의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0.74배, 일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0.91배, 세계무역 점유율은 불란서의 2.01배(미국의 2.8배)였고, 1880년에는

이제 패권안정이론의 전형이랄 수 있는 Krasner의 이론을 좀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는 우선 국제무역구조의 영향을 받는 국가이익(state interests)을 국가의 ① 정치적 힘(polynomial power), ② 총국민소득(aggregate national income), ③ 경제성장, ④ 사회적 안정성(social stability)의 네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어서 이 각각이 국제무역체제의 개방도(openness)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¹²⁾

(1) 개방도와 정치적 힘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힘은 무역단절에 따른 상대적 기회비용(relative opportunity costs of closure)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Hirschman (1945) 에게서 빌린 것으로서, 갑작스런 무역단절(trade stoppage)은 직접적 소득손실과 더불어 생산요소의 재배분(reallocation)에 따른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기회비용이 낮은 국가일수록 정치적 힘을 크게 지닌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선진국/대국의 경우 작고, 저개발국/소국의 경우 크다. 따라서 선진국/대국은 국제무역구조가 개방적일 때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다.

(2) 개방도와 총국민소득(aggregate national income)의 관계: 모든 국가에 있어서 개방도가 높을수록 총국민소득은 높고, 그 정도는 소국일수록 크다. 이것은 소국일수록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의 협소성으로 규모경제이익을 누리기 어려운데, 개방적인 무역은 이들이 이런 제약을 탈피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3) 개방도와 경제성장의 관계: 양자의 관계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국의 경우 양자의 관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국/선진국의 경우는 개방도가 높은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방도가 높을 때 국내경제로부터 자원이 이탈하고, 잠재적 경쟁국에 산업육성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에 노출되어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을 지속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0.79배, 일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1.3배, 세계무역 점유율은 불란서의 2.22배(미국의 2.9배), 세계투자액 점유율은 불란서의 1.93배에 달하였다. 한편 미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한 1937년, 그리고 패권적 지위를 확립한 1950년의 수치와 비교해 본다면, 1937년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소련의 2.67배, 일인당소득은 영국의 1.26배, 세계무역점유율은 영국의 1.13배, 세계투자액 점유율은 영국의 5.53배였고, 1960년에는 각각 2.81배, 2.05배, 2.15배, 6.60배로 증가하였다.

12) 그가 사용하고 있는 국제무역체제의 개방도(혹은 패쇄도) 지표는 ① 관세수준, ② 무역의존도, ③ 지역블록을 통한 무역집중도이다.

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중간 규모국의 경우는 예측이 곤란하다. 요컨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방은 소국과 대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4) 개방도와 사회적 안정성 (social stability)의 관계: 개방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안정성은 당연히 저하된다. 그리고 이 효과는 소국/저개발국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Krasner는 이상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개방도가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의 잠재적 경제력(국가의 크기와 발전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밝힌다음, 국가간의 잠재적 경제력 분포(독립변수)가 관세수준, 국제무역의 크기(비중), 지역주의적 무역패턴 등 국제무역구조(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1) 다수의 소국/선진국으로 구성된 체제: 이 체제에서 소국/선진국은 개방도가 높을 때 총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나, 사회적 안정성은 약화되게 된다. 무역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은 대칭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힘에는 변화가 없다. 문제는 사회적 불안정성인데, 선진국의 경우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당히 완화된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는 개방적인 국제무역구조가 지배하게 된다.

(2) 발전수준이 다른 소수의 대국들로 구성된 체제: 이런 분포하에서 무역이득은 비교적 낮다. 개방에 따라 저개발국은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생산요소 이동성이 낮아 무역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힘도 약화된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와 반대다. 따라서 대국/저개발국은 개방체제를 원치 않는다. 한편 대국/선진국도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한 개방체제를 강요할 수 없다. 그 결과 이 체제하에서 국제무역구조는 폐쇄성을 띠게 된다.

(3) 다른 국가보다 훨씬 크고 선진화된 국가(패권국)가 존재하는 체제: 우선 패권국은 국제경제 참여수준이 낮고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방체제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위의 네가지 모든 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소국들은 개방성이 증가할 때 총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득을 얻을 수 있다. 정치적 힘의 측면에서는 어차피 약소국이므로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 중간규모국가의 경우는 패권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패권국이 경제개발 모델로서 상징성을 발휘하거나, 국내시장을 제공하는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거나, 군사적 (안보)능력을 발휘하여 개방체제를 수용

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체제에서 패권국의 국력이 신장세를 보일 때, 패권국이 개방적인 무역체제를 주도하고 그 결과 국제무역 구조가 개방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론적 기초 위에서 Krasner는 패권국의 존재와 국제무역체제의 개방성 간의 관계에 따라 기간구분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① 1820-1879년간은 영국이 국력상승기의 패권국으로 군림한 시대로서, 곡물법(Corn Laws)을 폐지하고, 불란서와 Cobden-Chevalier Treaty를 체결하였으며, 국제통화를 안정시키고 런던을 국제금융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무역체제의 개방성이 드높았던 시기이다. 그러나 ② 1880-1900년간에는 영국의 패권이 쇠퇴하면서 개방성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던 시기이며, ③ 1900-1913년간은 전기의 추세가 대체로 이어진 가운데 국제무역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던 시기이다. ④ 1918-1939년간은, Kindleberger가 주장한 바와 같이, 영국은 국제무역체제를 주도해 나가고 싶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했던 반면, 미국은 능력은 갖추었으나 용의가 부족하여 여전히 고관세를 유지하는 등 국제무역체제가 폐쇄적이었던 시기이다. ⑤ 1945-1960년간은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확보하면서 GATT체제를 출범시키는 등 국제무역구조가 개방성의 꽃을 활짝 피운 시기이다. 여기에서 그는 ①, ②, ⑤는 그의 이론에 의해 잘 설명되나, ③과 ④ 그리고 1960년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¹³⁾

3. 패권안정이론에 대한 비판

Kindleberger, Krasner, Gilpin등의 패권안정이론은 1980-1990년대초에 걸쳐, 주로 다음 절에서 고찰하게 될 자유주의적 전통의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많은 비판은 이 접근방법에 의해 제시된 역사적 설명, 그리고 패권국의 패권적 지위의 쇠퇴가 자유무역체제의 후퇴를 초래한다는 이 이론의 함의(implications)의 현실적 타당성 여부에 집중되었다.

13) 후자와 관련하여 Krasner는 영국이 패권적 지위가 상실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지향한 사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도 한동안 국제무역체제를 주도하지 않았던 반면에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말 이후에도 여전히 자유무역에 집착하고 있는 사실을 반응의 지체(delayed reactions)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제도(institutions)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국제무역체제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어떤 외적 계기(catalytic external event)의 존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McKeown(1983)은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인 1860년 영불간의 Cobden-Chevalier Treaty에서 실제적으로 영국이 협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영국이 이 협상을 제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무역자유화에 뜻이 있어서기보다는, 불란서와의 정치·외교적 관계개선을 위해서 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영국이 불란서보다 약한 국가들과 개방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19세기에 유럽국가의 관세수준은 영국의 패권적 영향보다는 당시 景氣의 호·불황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p. 73-91).

한편 Stein(1975)은 좀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자유무역체제가 수립, 유지, 포기되는가에 주목하였다.¹⁴⁾ 그는 자유무역체제는, 그것의 성격상, 어느 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힘을 가진 국가간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협정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도록 하려면 패권국가가 선도하고 다른 국가가 그 뒤를 쫓아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 패권국가는 비상호주의적/비대칭적으로 다른 국가에 중요한 양허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요컨대 패권국의 존재와 패권의 약화가 곧 자유무역체제의 등장과 쇠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나 자기의 시장을 열어 둘 수 있으며, 어느 정도나 다른 국가의 중상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용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19세기 무역질서의 붕괴는, 패권 안정이론이 시사하듯이, 영국의 상대적 쇠퇴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제1차대전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반박하였다.

David A. Lake(1984)는 패권국가와 여타의 추종국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이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의 자유무역의 성쇠나,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부흥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체제가 지속되었던 현실을 잘 설명해 줄 수 없음을 보여 주면서, 패권은 자유무역체제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Lake(1991)는 영국과 미국의 패권을 비교하면서 양자 사이에는 유사성보다도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4) 그는 Kindleberger가 자유무역체제의 형성보다는 그것의 유지가능성과 붕괴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Gilpin과 Krasner는 자유무역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관심을 두기는 하였으나, 패권국가가 자유무역을 추구할 때 자유무역체제가 당연히 형성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연구와 달리, 일단의 분석가들은 특정 이슈분야(issue areas)에 있어서의 이 이론의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Keohane(1980)은 패권안정이론은 단적으로 말해 유형적 국가능력(tangible state capabilities) 또는 권력자원(power resources)을 국가행동(state behavior)과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하는 이론, 즉 “권력자원 이론(power-as-resources theory)”이라고 규정하고(p.137), 과연 이 이론이 현실적으로 국제레짐의 변화¹⁵⁾를 얼마나 적절하게 설명해내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는 이런 목적에서 1967-77년간의 국제무역, 통화, 석유(이것의 생산과 가격책정) 부문의 세가지 국제레짐의 변화를 패권적 구조(hegemonic structure)의 변화와 연결시켜 비교분석해 본 결과, 세 경우 모두에 있어서 유형적 권력자원의 변화와 레짐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이 이론의 인과적 설명력을 평가해 볼 결과 레짐의 변화가 가장 커던 석유부문에서는 설명력이 비교적 높았으나, 레짐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던 국제통화 부문이나 레짐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국제무역 부문에서는 매우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Keohane은 패권안정이론은 유형적 권력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신뢰도(confidence)나 다른 행위자에 대한 상대적인 정치적 지위(political position) 등과 같은 무형적 자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이론은 기껏해야 국제레짐의 변화방향이나 패권국의 행동반경에 대한 직관적 예측(first-cut approximation)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정확한 예측에는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는 “내재적으로 조악한 모형(inherently crude or rough models)”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그나마 이 이론이 어느 정도 현실적 적실성을 보인 것은 전반적인 구조(overall structure)의 설명이 아니라 특정 이슈영역(specific issue areas)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⁶⁾

15) Keohane(1980: 133)은 국제레짐을 강한 레짐(strong regime)과 약한 레짐(weak regime)을 구분한다. 강한 국제레짐은 참여국들이 양해하고 있는 일련의 규칙과 행동기준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질서있는 국가행동이 일어나는 레짐이나, 약한 국제레짐은 국가마다 규칙을 달리 해석하거나 그로 인해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레짐이다. 더 나아가 레짐의 강약은 레짐을 구성하는 규칙의 명시성이나 묵시성과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규칙(explicit rules)으로 뒷받침되는 레짐은 묵시적 규칙(implicit rules)으로 뒷받침되는 레짐보다 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71-76간에 국제통화레짐은 매우 약했으나, 이 당시에도 Bretton Woods의 통화규칙들은 명목상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 있었다.

16) 물론 그는 각 이슈간에 상호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 이론의

한편 Cowhey and Long(1983)은 1960-70년대의 자동차산업에서의 자유무역의 성쇠는 Susan Strange와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과잉시설능력론(excess capacity)을 원용할 때 좀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¹⁷⁾ 이들은 Strange가 패권안정이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수 국가가 어떤 산업부문에서 동시적으로 산업조정(industrial adjustment) 문제에 봉착할 때,¹⁸⁾ 자유무역적 사고로부터의 중대한 이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점에 주목한다. 해당산업의 노동자와 기업들의 요구, 그리고 주요 시장에서 국내기업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관료의 우려가 합해질 때 해당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간섭의 강화가 초래되며, 이 때 문제해결책으로서 관련 정부와 기업집단간에 약한 경쟁자의 시설능력 삭감비용을 완화하는 한편, 강한 경쟁자에게 외국시장을 일정한도 보장하는 내용의 조합주의적 국제협정(international corporatist arrangement)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감독하의 과정, 혹은 약한 형태의 카르텔(loose cartel)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¹⁹⁾

더 나아가 패권안정이론의 분석적 기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Conybeare(1984)는 이 이론의 기본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패권안정이론가들이 자유무역을 ‘공공재(public good)’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무임승차국(free rider)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자유무역은 비배타성(non-excludability)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공공재로 불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적은 양의 정보로 일반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고, 다른 설명과 분석수준이 어떤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 17) Strange 자신도 부정하고 있듯이 그녀의 시각을 명시적으로 “과잉시설능력 이론”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한지 모른다(Cowhey and Long, pp. 162-63).
- 18)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요인으로서 Strange는 ① 여러 산업에서의 생산단위당 자본투자액이 증가(그 결과 시설유지에 따른 비용 급증), ② 신흥공업국의 등장, ③ 수요패턴의 변화를 들고 있다.
- 19) 이러한 Strange의 분석에 대해 Cowhey and Long(pp. 164-65)은 패권국이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여 중재 역할을 할 때 갈등이 줄고 따라서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탈 충동도 감소하지 않는가 반문한다. 예를 들면 1977년의 미국, 유럽, 일본간의 철강협정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다시 말하면 주생산자의 수가 적을수록) 과잉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기존의 유수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조합주의적 협정 체결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에 높아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비록 자유무역이 공공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특권그룹 (privileged group)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k-group” 또는 소수 국가 그룹 (small group)의 공동노력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고 본다.²⁰⁾ 그는 또한 Krasner와 Gilpin의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패권국은 자유무역보다는 최적관세 (optimal tariff)의 부과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사익 (economic self-interest)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Snidal(1985)도 자유무역이 과연 공공재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패권국 또는 패권적 레짐 (hegemonic regime)의 성격에 따라 공공재의 이익이 공유되 기보다는 그것이 패권국의 영향으로 일국에서 타국으로 재분배되는 경우가 존재 하며, 많은 문제영역에서 무임승차국의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²¹⁾ 실제로 GATT에서 비회원국이 배제되고 있고, Tokyo Round에서 체결되었던 다수의 협정 (codes)이 서명국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게임이론에 기초하여 패권의 쇠퇴 이후에도 소수의 국가간의 집단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소위 주요국가연합 (coalitions of ‘k-groups’)²²⁾이 패권국가의 기능적 대용물 (functional equivale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패권국의 약화는 불가피하게 자유무역체제의 쇠퇴를 초래하게 된다는 패권안정이론의 핵심과 관련하여, 1970-80년대의 미국이 과연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나타났다.²³⁾ Russett(1985)은 이 기간에 미국은 비록 권력기저 (power base) 면에서는 상

20) 특권그룹은 Mancur Olson의 집단행동이론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 또는 그중 소수가 비록 자신이 공공재 (집단재)의 공급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유인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Olson, 1965: 49-50). 이런 면에서 패권안정이론은 국제무역체제에 관련하여 특권그룹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Gowa, 1989a).

21) 참고로 Snidal은 패권모델은 시혜적 패권 (benevolent hegemony) 모델과 강제적 패권 (coercive hegemony) 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Kindleberger와 Keohane등의 관점으로서 패권국가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비해, 후자는 Gilpin과 Krasner등의 관점으로서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이 공공재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윤영관, p. 104).

22) ‘K-group’이란 G-7, G-5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단의 국가군을 말한다.

대적으로 쇠퇴하였을지 모르나, 여전히 선진국간의 평화지대('zone of peace')를 지탱하고, 상대적으로 개방된 세계경제체제를 유지하였으며,²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등 “결과에 대한 통제력 (control over outcomes)” 측면에서는 패권적 힘을 흔 없이 보전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패권보유기에 구축한 국제제도와 Gramsci(1971)가 말한 ‘문화적 패권(cultural hegemony)’에 힘입은 바 크며, 바로 여기에 패권의 원천을 지나칠 정도로 권력기저에서만 찾으려 하는 패권안정 이론의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같은 맥락에서 Strange(1987)는 현실주의자들이 패권의 생성을 관계적 힘(relational power)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패권은 세계정치경제의 구조를 선택하고 형성하는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미국의 구조적 힘은 안보, 생산, 금융, 지식의 네 분야에서 균형있게 증가해 왔으며, 이 힘은 아직도 존재하다고 주장한다.²⁵⁾ 이런 면에서 그녀는 근년의 세계경제질서의 혼란이 미국의 패권적 힘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패권안정이론적 관점은 타당치 않으며, 이는 미행정부와 의회간의 격심한 갈등과 대립, 이익집단의 과도한 영향력 투입 등 미국의 특수한 국내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Yarbrough 부부(1987)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anarchy)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국제무역체제에서 국제무역협정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협정국의 위

23) 일반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쇠퇴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의 대표적인 학자인 Rosecrane(1976)은 “미국의 체제유지자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하고, Oye(1979)는 “미국의 패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다.

24) 이와 관련하여 Russett은 미국이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진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과도하게 큰 비용(disproportionate costs)을 지불한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25) 유사한 관점에서 Nye(1990)는 오늘날 국제체제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물적 자원에 기초해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성권력(hard power)이 아니라, 문화·이데올로기·제도 등에 기초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성권력(soft power)임을 주장한다. 그는 이런 면에서 미국은 오늘날 경성권력 자원 면에서 아직도 월등할 뿐만 아니라, 일본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연성권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Strange와 Nye는 미국의 패권의 쇠퇴를 강조하는 논리가 자칫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잃고 국익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냐는 다른 국가들의 부정적 반응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윤영관, p. 108).

반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거래특정적 투자(transaction-specific investment)²⁶⁾가 이루어져 거래 쌍방이 복점(duopoly)적 지위에 서게 될 때, 기회주의적 보호주의(opportunistic protectionism)의 유혹에 빠져 들기 쉽고 그 결과 생산시설의 과잉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아 국가간에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어려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서만 패권안정이론은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패권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 협력, 즉 “패권적 협력(hegemonic cooperation)”이 일어나는 것은 기회주의적 보호주의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해 당근(carrot)과 채찍(stick)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권국의 존재 필요성이 큰 경우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협상과 중재 메카니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GATT체제를 패권적 협력모델이 잘 부합되는 경우로, 이밖에 19세기에 영국이 추진했던 일방적 무역자유화나 최근의 소수국간 협정(minilateral agreements)의 경우는 패권안정이론의 적실성이 낮은 경우로 보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까지 패권안정이론의 거의 모든 요소가 좀더 세밀한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신현실주의 및 패권안정이론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가들의 주장과 이론적 기저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같다. 따라서 패권안정이론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에 이어 논의할 것이다.

III. 자유주의 전통과 신자유주의 제도론

1. 자유주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근대 서유럽이라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발전된 정치사상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그 핵심적 가치로 강조하

26) 거래특정투자는 특정 거래를 위해 행해지는 투자로서 그것이 다른 용도나 거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자산적 가치가 적은 투자를 말한다. 소련의 천연가스 수출을 전제로 유럽국가들이 파이프라인 건설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다. 이들은 공산품의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증가는 거래특정 자산을 생성시키며 기회주의적 보호주의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내 무역(intra-firm)의 증가는 이런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탐구해 왔으며, 국제정치경제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외적 환경으로서 국제평화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근대 서유럽의 역사적 변동 속에서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자유주의를 일의적으로 개념규정하기는 힘들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자유의 의미와 정의는 각 시대마다의 주요관심사에 따라 내용을 달리해 왔다. 그러나 이를 단순화한다면 국제정치경제학에서의 자유주의적 전통은 ① 상업적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commercial or economic liberalism*), ② 제도주의적 자유주의(*institutional liberalism*)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⁷⁾

1) 경제적 자유주의

Adam Smith로 대표되는 상업적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비교우위 원리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국제협력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케인즈주의, 통화주의(*monetarism*), 오스트리아 학파, 합리적 기대론자(*theorists of rational expectations*) 등 여러 분파로 나뉘나, 이 모두는 국내 및 국제경제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서 시장과 가격기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효율의 극대화, 경제성장, 복지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신봉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이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발생적 원리들로서 그것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내적 논리에 따라 중앙의 지시(*central direction*) 없이도 가능한다고 본다.

27) Nye(1988: 246)는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의 자유주의를 크게 ① 상업적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 ② 민주적 자유주의(*democratic liberalism*), ③ 제도주의적 자유주의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민주적 자유주의는 국내정치체제의 성격과 국제 평화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원칙에 근거하는 공화주의 내지 민주주의 체제가 전제주의 체제보다 평화지향적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화주의 체제에서 전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입장에 있는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전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철학적 기반인 이른바 민주주의를 통한 평화(*democratic peace*)도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명제에 근거한 것이며, 이런 사상의 뿌리는 민주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윤영관, 1996: 26).

시장기구에 대한 믿음의 논거는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며, 인간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데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활동은 국가권력과 안보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의 일차적 목표는 역시 개별 소비자의 후생의 증진에 있다고 본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유무역과 개방적 시장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이것이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교역의 상호이익과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협력적인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교역과 경제적 상호관계는 평화로운 국제관계의 원천이라고 믿는다. 정치는 분할하려는 속성을 가지지만, 경제는 사람들을 통합시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로운 국제경제는 상호이익의 결속을 통해 국제 정치에 중화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Gilpin, 1987: 26-31).

2)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의 또 다른 유형인 자유주의적 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는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사고는 Kant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유럽의 자유국가들이 조약의 형태로 연방(federation)을 형성하고 국제법을 지킬 때 평화가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현실주의자들이 국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힘에 의존하려 했다면, Kant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들은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제한함으로써만 국제협력(평화)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기능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Mitrany(1966)는 평화의 문제를 국가주권의 제약, 그리고 연방과 같은 국제기구의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고전적 제도주의론자들인 연방주의자들과는 달리 이 문제를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는 비정치적이고 기능적인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의 경험에 다른 분야로

28) 14세기 초의 단테, 뒤부아에서 18-9세기의 생피에르, 벤담, 칸트, 생시몽에 이르는 평화사상가들은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기구(supranational institutions)의 형성을 통해 국제협력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도 엄격하게 말하면 제도주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국제관계의 본질을 무정부상태(anarchy)로 파악하기보다는 공동사회(community)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공동사회 안에는 당연히 규범이 존재하며 유럽적 공동사회의 규범으로서 대체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기반을 강조하였다.

확산되어 나갈 때, 궁극적으로 영토에 기반한 정치적인 분할까지도 무의미해지게 될 것으로 보았다. 전쟁과 평화가 사회경제적 적응과 부적응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이 문제는 영토가 아닌 기능에 기반을 둔 제도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제도주의적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 관한 현실주의자들의 기본가정을 공격한다. 우선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가정에 반대한다. 기능주의는 전문화된 국제기구와 그에 속하는 기술전문가들(technical experts)을, 신기능주의는 노동조합·정당·산업별 조합(trade association)·초국가적 관료제(supranational bureaucracies)를, 상호의존이론은 다국적 기업과 국가간 또는 정부간 연합(transnational and transgovernmental coalitions)을 국제관계의 중요행위자로 포함시킨다.

둘째, 제도주의는 국가는 단일의, 합리적 행위자(unitary, rational actor)라는 현실주의의 가정을 반박한다. 기능주의자들은 근대국가 내에서 권위는 이미 분권화되었으며, 국제관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상호의존이론에서는 대외정책에 대한 사회세력들의 접근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정책독점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국가는 현실주의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명확히 정의된 국익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국제제도에 관한 현실주의자들의 비관적 견해도 부정한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은 국가들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무정부성을 극복하고 국제협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바로 국제기구(제도)라고 보는 것이다(Grieco, 1990: 4-5).

3)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1970년대의 동서냉전의 심화, 보호무역 및 지역주의 대두와 같은 국제사회의 여러 갈등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① 국제관계에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② 특히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배타적인 영향

29) 1940-50년대초에 대두한 이러한 기능주의적 통합이론(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은 Hass(1964)를 중심으로 한 1950-60년대의 신기능주의적 지역통합이론(neofunctionalist regional integration theory), 앞에서 언급한 1970년대의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 등으로 발전하면서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맥을 잇고 있다.

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③ 정부간 연결망(network)에서 국가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④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관료들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Grieco, p. 7).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가정들이 너무 소박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받아들이고,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이 국제협력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현실주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 그룹을 대표하는 Keohane(1984: 49-64)은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초랄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 “권리와 의무로 정의된 행동기준(standards of behavior defined in terms of rights and obligations)” (p. 57)³⁰⁾ — 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적 선택이론(theory of rational choice)에 입각하여 그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한편으로 국가는 합리적 이기주의자(rational egoist)이며, 국제관계의 본질은 무정부성에 있다는 현실주의의 기본가정을 수용하면서도, 패권국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국제레짐은 형성·유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패권국 없이도 국제협력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³¹⁾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레짐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패권국의 존재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며, 일단 형성된 국제레짐은 패권국의 쇠퇴 이후에도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Keohane은 패권안정이론가들이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국제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혹은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이론을 원용하고 있으나,³²⁾ 이런 이론들의 가정은 현실세

30) 레짐의 개념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Ruggie(1975: 570)은 이를 “일련의 상호기대, 규칙과 규정, 계획, 조직적 에너지와 재정적 기여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일단의 국가들이 수용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Krasner(1983: 2)는 국제적 레짐을 “일련의 암묵적·명시적 원리, 규범, 규칙과 의사결정절차로서 주어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레짐의 개념은 패권안정론자들이 보였던 패권 쇠퇴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대한 비관적 견해로부터의 탈출구를 제시해 준, 패권 개념의 자유주의자적 대안이었다(윤영관, p. 101).

31) Keohane은 패권은 ① 원료, ② 자본공급원, ③ 시장에 대한 지배, ④ 고부가 가치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의 경쟁력 등 네 가지 물적 자원면에서의 월등성(ponderance)을 의미할 뿐이다(p. 32).

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죄수의 딜레마이론이 일회적인 게임을 상정하고 있으나, Axelrod(1984)의 상호주의(reciprocity)이론, 일명 ‘되받기(tit-for-tat)’ 전략이론을 원용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 게임은 반복적 게임(repeated games)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런 반복적 게임 하에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인 국가는 만일 자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차후 상대국도 자국의 행동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대응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이 최선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협력은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Keohane, 1984: 66-69).

그는 또한 패권안정이론이 곧잘 원용하는 집단행동이론에서는, Olson(1965)이 지적하듯이, 게임의 참가자가 다수이고 참가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임승차(free ride)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특정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하는 국가는 대부분 경우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 가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참가국 수가 적으면 규칙 위반행위의 검증비용과 제재비용(sanctioning cost)이 크게 감소되므로 무임승차 현상의 극복이 생각보다 쉽고, 따라서 국가의 협력 동기도 강화된다는 것이다.³³⁾

Keohane(1984: 76-79)은 국가가 국제레짐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가 상호협력 및 합의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레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국제레짐은 자력구제적 체제(self-help system) 하에서 파생되는 법적 의무(legal liability),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정보유통(information flow) 문제 등을 크게 해소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가간의 상호협력과 합의형성을 용이하게 해 주는 국제레짐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현실주의 논쟁의 재연

이같은 신자유주의적 제도론은 1980년대 중반이후 패권안정이론가들의 비판을

32) 죄수의 게임에서 각국의 상호배반(mutual defection)보다는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을 ($DC > CC$), 상대국에게 배반당하는 것보다는 상호배반(mutual defection)을 ($DD > CD$)을 선호하기 때문에 $DC > CC > DD > CD$ 의 선호체계를 가지나, 중앙집권통치체(centralized authority) 또는 국가들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 상황하에서는 DD 가 균형점이 된다.

33) 참가국은 위반행위의 검증비용(verification cost)이 상호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작다면 각국은 좀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되었다. 먼저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제도론자들이 국가가 합리적 이기주의자라는 현실주의의 이론적 가정을 따르고 있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생존이 중시되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국가는 스스로의 절대적 이득 (absolute gains) 도 이익이지만, 다른 국가가 자국에 비해 얼마나 크고 작은 이득을 얻는가 하는 상대적 이득 (relative gains) 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Grieco, 1990: 27-29). 따라서 국가는 협력을 통해 자국이 어느 정도의 절대적 이득을 얻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그 협력이 상대방에게 더 큰 비대칭적 (asymmetrical) 이득을 줌으로써 협력이전에의 균형상태 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ibid., pp. 35-48).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제도론이 폐권안정이론을 집중적인 공격대상으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재비판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Joanne Gowa (1989a) 는 폐권안정이론에 맹렬한 비판을 가했던 Conybeare의 논리를 철저하게 재반박하였다. 첫째, 폐권국은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폐권국은 폐권안정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자유무역이 아니라 최적관세 (optimal tariff) 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폐권국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적관세의 부과를 포기할 충분한 유인이 있다고 반박한다.³⁴⁾ 또한 실제로 19세기 중엽 영국은 해외시장에서의 자국의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최적수준보다 낮은 관세를 유지하였으며, 1930년 미국이 Smoot-Hawley 관세법을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해 보려 하였으나 오히려 타국의 무역장벽을 높이는 역작용만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이후 무역 자유화에 열성적으로 나섰던 역사적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34) 이는 국내시장에서 독점공급자가 단기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점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자신의 생산비용이 독점가격보다 낮다는 신호를 경쟁기업에 보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쟁기업의 진입 (entry) 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에서다. Gowa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탄력성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폐권국에 대항하기 위해 소국들이 조직화하는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 이 높은 상황에서 폐권국은 최적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둘째, Gowa는 자유무역을 공공재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Conybeare의 비판을 재반박한다. Conybeare는 국가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무임승차국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자유무역은 비배타성(non-excludability)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공공재로 볼 수 없다고 말하나, 이를 받아들일지라도, 자유무역으로부터 이탈하는 국가를 자유무역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데는 상당한 제재 비용(sanctioning costs)이 들어가고, 제재에 따른 이득은 비배타적이라는 의미에서 제재 행위 그 자체는 여전히 하나의 공공재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제재 행위가 공공재인 이상 자유무역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재 행위가 신뢰성있는 공약(credible commitment)으로서 효력을 지니도록 함과 동시에, 제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용의를 지닌 패권국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Gowa의 생각이다.

셋째, Gowa는 Conybeare가 패권국가만이 모든 공공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위 “k-group”(또는 소수 국가 그룹)이 패권국가와 같은 특권그룹(privileged group)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선 소수 국가그룹이 특권그룹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간에 어떤 협력적 균형(cooperative equilibrium)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각국은 이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고 있어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수 국가 그룹이 특권그룹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³⁵⁾

또한 소수 국가 그룹은 협정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협정 불이행국의 기만행위를 억제(deter)하거나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Gowa의 생각이다. 소수 국가 그룹 이론가들은 협정 불이행국이 협정을 준수하도록 강제(또는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① 다른 레짐에 연계시키거나, ② 국가의 평판(reputation)을 이용하거나, ③ 자국의 무임승차 행위가 결과적으로 레짐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Gowa는 ① 다른 레짐과의 연결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② 모든 국가가 어떤 국가의 과거 평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자국의 입장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③ 어떤 국가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그 국가의 특수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그 국가에게 그 국가

35) 비록 국가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국가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국가에 대해 가의적 지불(side payments)을 제공하려고 할지라도 후자는 장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 무임승차 행위가 레짐 전체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신뢰할만한 위협(credible threat)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Gowa는 패권안정이론(그리고 그것의 비판이론)의 약점도 인정한다. 패권안정이론은 정치적인 진공(polynomial vacuum) 속에서의 경제적 교환 측면에 주로 분석의 초점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안보외부성(security externalities)을 고려하지 못하는 데 최대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경제에서 무역장벽의 제거는 국가의 실질소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국가의 상대적 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패권안정이론은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Gowa는 무역은 반드시 생산과 연계되고, 무역의 결과 국내생산요소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이 증가하게 되면 이 중 일부는 잠재적인 군사력의 증대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국가간의 세력균형이 교란될 수도 있다는 국제무역의 이러한 또 다른 측면이 국제무역자유화에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Gowa(1989b)는 국제무역의 안보외부성 측면에서 보면 양극체제(bipolarity)가 다극체제(multipolarity)에 비해 자유무역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좀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서 그녀는 첫째 어떤 국가가 동맹권에서 이탈(exit) 하기는 다극체제에서 보다도 양극체제에서 더 어렵고, 둘째 바로 이런 이유로 패권국의 동맹내 국가에 대한 이타주의(intra-alliance altruism)도 다극체제에서 보다 양극체제 하에서 좀더 잘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듣다. 패권국이 자국의 단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최적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동맹권내의 국가들에게 개방된 시장을 제공하려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고려에서라는 것이 Gowa의 판단이다.

이상과 같은 패권안정이론에 대한 옹호론은 그것이 여전히 국제체제의 구조와 성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우 큰 유용성이 큰 이론임을 확인해 주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19세기 및 20세기의 경제적 개방도(economic openness)의 전전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로서 패권안정이론의 유용성은 재조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James and Lake(1989)는 영국이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한 배경에는 당시 곡물 수출 시장 확보에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서부의 농민집단을 움직여 이들이 미국이 좀더 개방적인 무역체제로 나가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끔 유도하려는 영국의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

IV. 맑시즘 전통과 세계체제이론

1. 맑시즘과 레닌의 제국주의

19세기 중반의 자유주의와 고전경제학에 반기를 든 Marxism은 일종의 범사회 과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제관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Gilpin, 1987: 35). Marx는 19세기 중반 유럽의 주요국에서의 자본주의의 성숙과 주변국가의 시장경제편입을 단순히 자본주의가 종말을 향해 가는 준비단계에서의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런 예측은 빗나갔다. 본질적인 면에서 국내경제이론으로 볼 수 있는 Marxism은 민족주의가 거세지고, 자본주의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며, 제국주의로 확산되어 가는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국제정치경제관계 이론으로 변모하였다. 여기에 레닌의 「제국주의론」 출판은 결정적 전기를 제공하였다.³⁶⁾

레닌은 제국주의적 팽창을 자본주의의 세가지 운동법칙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³⁷⁾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해외로 팽창하지 않고서

36) Marx와 Lenin 사이의 기간에 자본주의는 크게 변모하였다. Marx는 서유럽자본주의를 언젠가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의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폐쇄경제체제로 보았다. 그러나 1870년에서 1914년간에 자본주의는 생명력있고 기술적이며 더욱더 세계적이고 개방된 체제로 탈바꿈하였다. Marx의 생존시 더디게 발전하는 세계경제의 주된 연결고리는 무역이었다. 그러나 1870년 이후부터는 영국 등 선진국의 해외투자 및 자본수출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계경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더욱이 Marx는 주로 소규모의 경쟁적인 제조업(small, competitive, industrial firms)으로 구성된 자본주의를 상정하였지만, 레닌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는 거대금융기업들(great banking houses; haut finance)에 의해 지배되는 거대한 산업연합(industrial combines)에 의해 지배되었다. 레닌은 자본에 의한 자본의 통제, 즉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통제를 자본주의 발전의 극치로 보았다.

37) 여기서 세 가지의 필연적인 경제적 법칙이란 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특정재화를 과잉생산함으로써 수요와 공급간 균형은 파괴되고, 시장의 무정부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주기적인 불황과 경기변동이 야기된다 는 불균형의 법칙(law of disproportionality), ② 자본주의의 동기(motive force)는 이윤에 있으며 자본가들간의 경쟁으로 부는 효율적인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궁핍화된다는 자본집중의 법칙(law of the concentration), ③ 자본이 축적되고 더욱 풍부해짐에 따라 수익률은 체감하며, 따라서 투자유인도 감소한다는 이윤

는 경제침체나 내부혁명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경제는 결국 식민지 획득을 통해 재고상품을 처분하고 값싼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잉여자본의 탈출구를 찾아 경제적 잉여를 확보하는 길로 나갔다는 것이다. Bukharin과 같은 제국주의 이론가들은 특히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팽창적 성격, 즉 자본제적 사회관계가 국제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합된 세계시장을 확립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이수훈, 1991: 2), 레닌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팽창속성을 국제자본주의체제가 궁극적으로 파멸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Gilpin, pp. 38-39).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은 계급투쟁보다는 국가간 투쟁에서 발현된다고 믿은 레닌은 자본주의적 국제경제는 세계를 발전시키지만 이를 균등하게 발전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개의 자본주의 경제는 불균등성장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국제정치적 변화를 회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³⁸⁾ 쇠퇴하고 부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경제적·정치적 경쟁의 가속화로 경제적 분쟁, 제국주의적 경쟁(imperial rivalries)은 불가피하고, 급기야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영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의 운명이었고, 제1차대전은 쇠퇴국면에 들어선 영국과 신홍자본주의국가들이 벌인 영토재분할 전쟁 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2. 세계체제론

레닌을 비롯한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가들이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제국주의적 팽창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된 이론적 관심을 두었다면, 현대의 맑스주의 계열의 국제관계이론가들은 제국주의 정책이 非서구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종속이론(dependency theories)이나 Wallerstein 및 Modelski의 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ies) 등은 바로 이런 제국주의 이론의 현대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세계체제이론은 196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화론/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근대화론/발전이론은 제3세계국가들의 사회내부적 환경

을 저하의 법칙(law of the falling rate of profit) 등을 말한다(Gilpin, 1987: 36-37).

38) 자본가들은 아주 합리적이어서 식민지를 놓고 서로 싸우는 대신에 연합세력을 형성하여 식민지를 공동으로 착취하게 된다는 Kautsky의 초제국주의론doctrine of ultra-imperialism)에 대하여 레닌은 불균등발전의 법칙(law of uneven development)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함을 보였다(Lenin, 1939[1917], 119).

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어떻게 서구의 발전모델이 상이한 역사 및 사회구조와 문화전통을 갖고 있는 저개발국에 전파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저개발국의 전근대적 가치를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고 선진국의 발전경험에 입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대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종속이론과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세계체제론은 근대화이론은 서구중심적이며, 서구국가와 제3세계국가의 발전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제3세계의 저발전 현상은 서구세계의 발전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3세계의 저발전은 서구세계의 국제적 팽창과정에서 제3세계가 식민지로 편입된 결과로 보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발전문제를 상호불가분의 통일적 상태로 파악해야 하며, 이런 면에서 세계경제의 통일적 인식과 파악이 요청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이수훈, p. 14). 아래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대표하는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Wallerstein은 근대세계체제(modern world-system)는 그 나름대로의 생애주기를 갖는 무수한 ‘역사적’ 사회체계(social systems) 가운데 하나인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서, 약 50년마다 경제성장과 정체를 반복하는 콘드라티에프의 長週期(Kondratieff's long waves)를 타고 발전하며,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근대세계체제의 총체적인 역사발전 과정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둔 그의 세계체제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역시 세계체제(world-system)다. 세계체제는 물적 재화의 규칙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영토적 연결망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며, 경제적·정치적·군사적·문화적·규범적 관계로 구성되는 하나의 전체적 사회체계(물론 이것이 전지구적일 필요는 없다)다(Wallerstein, 1979: 157-160).³⁹⁾ 바로 여기에서 세계체제론의 독특한 관점이 잘 드러나는데, 이들은 사회변동이 일어나는 영역이 ‘사회’가 아니라, 각 세계체계가 단일의 생산양식을 갖

39) Wallerstein은 사회체계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그 속에서의 생활이 자기총족적이어야 하며, 둘째 발전의 동인이 내적이어야 한다. 즉 외부세력과 차단되어 있어도 그 체계가 동일한 양식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Wallerstein, 1974a: 347).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체계는 오직 세계체제와 소체계(mini-system: 폐쇄된 국지적 경제체제) 뿐인데, 소체계에는 세계체제에서와 달리 포괄적 분업과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세계체제는 다시 세계제국(world-empire: 중앙권력에 의한 공물의 착취로 정의된다)과 세계경제(world-economy: 시장교환에 의해서 연결된다)로 구분된다.

는 ‘총체 (totality)’로서의 세계체제이며,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 (capitalist world-economy) 만이 온당한 분석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⁴⁰⁾

16세기를 근대세계경제, 즉 자본주의의 태동기로 보는 Wallerstein은 “자본주의와 세계경제 (이것은 분업은 단일하지만 국체는 다양하다)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지,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상호분리시킬 수 없는 동일 현상을 서로 다른 것처럼 정의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1979, p. 6).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1979: 6) :

- (1) 이 체제의 추동력은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자본축적이다.
- (2) 이 체제에서 기본적인 분업구조는 중심부-주변부 (core-periphery)이며, 양 자간에는 부등가교환 (unequal exchange) 이 이루어진다.
- (3) 여기에는 반주변부 (semi-periphery) 라는 또 다른 구조적 구역이 존재한다.
- (4) 이 체제에서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wage-labor)로 상품화된다.⁴¹⁾
- (5)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경계 (boundary) 와 세계국가체계의 경계는 상응하는 경향이 있다.

Wallerstein과 여타의 세계체제론자들은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전지 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지구의 모든 영역들이 중심부-주변부 관계를 기축으로 한 국제적 분업체제 속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단일의 생산양식으로서 세계시장에서의 교역과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 국제분업에 따라

40) 총체 (whole)로서의 세계체제의 성격을 밝혀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 세계체제론자들은 여타의 분석단위, 예를 들면 계급, 지위, 집단, 지역, 그리고 주권국가나 민족사회가 온당한 분석단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들은 연구(분석)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41) 그는 또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몇가지의 경향성을 띠고 발전한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① 프롤레타리아화, ② 상품화, ③ 기계화다. 프롤레타리아화란 생산수단을 잊은 직접생산자가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 임노동제는 자본주의의 특징적 요소로서 맑스주의자들이 제조업 부문에서의 산업프롤레타리아 형성과정에 관심을 가진데 반해, 세계체제론자는 16세기이후 서유럽의 농업지역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프롤레타리아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상품화 (commercialization)란 토지, 노동 등의 생산요인들이 사회적 인습이 아닌 시장기능을 통해 사용·분배되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무한히 그 영역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본다. 기계화 (mechanization)는 노동생산성과 자본강도를 동시에 증가시킨다. 이 현상은 핵심부와 주변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며, 노동과정의 변화와 ‘소외’의 문제를 일으킨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긴 16세기 (long sixteenth century)’를 거쳐 ① 중심부(core), ②半주변부(semi-periphery), ③ 주변부(periphery)의 계층구조로 편성되었는데,⁴²⁾ 이 계층구조야말로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며, 지배와 착취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계층구조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또는 그것을 재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며, 이 위에서 세계적 규모의 생산·교역관계가 조직되고, 부동가교환에 의한 중심부의 주변부 수탈, 정치적 지배관계가 구축된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계층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종속이론 등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를 양분하고 그 각 지역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주목하였으나, Wallerstein은 여기에 독특한 구조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반주변부를 추가하고, 반주변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반주변부는 국가단위 내지 지역단위로 이루어진 일종의 ‘노동 귀족사회(labor aristocracy)’다. 반주변부는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하며 그 내부적 구성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반주변부는 단순히 핵심부와 주변부의 중간에 위치한 그 무엇은 아니다. Wallerstein은 사회의 계급구조에서 중간계층의 성격이나 기능과 유사하게, 반주변부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지난 500년간 존속하고 아직도 큰 변혁의 조짐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원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⁴³⁾ 중심부와 주변부 위계질서의 양극화를 막아내는 역할을 반주변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주변부는 반주변부성을 극복하고 핵심부로 진입 할만한 힘은 없다(1974a).⁴⁴⁾

한편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세계체제론자의 관점은

42)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며, 관계적(relational)이다.

43) 참고로 세계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자본주의의 모순과 긴장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도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양분구도는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로서, 중심부 자본주의가 누리는 세계문화적 해계모니의 현현, 또는 중심부 자본주의가 확산시킨 허위의식의 소산에 불과하다(이수훈, p. 43).

44) 그는 이에 속하는 국가의 예로서 스페인을 들고 있다. 19세기에 영국이라는 패권국가가 라틴아메리카를 주변부로 삼아 수탈하는 데, 스페인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Wallerstein은 197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이에 속하는 국가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쿠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동구권의 거의 대부분, 노르웨이, 핀란드, 알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나이제리아, 이란,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베트남,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 Galtung과 같은 학자들은 ① 분업의 경제적 차원을 핵심적인 요소로 보아 산업생산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중심부는 가공수준이 매우 높은 생산 활동이 주가 되며, 주변부에서는 농산물이나 광물과 같은 일차적, 채취적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전자는 완제품을 주변부에, 후자는 일차산물을 중심부에 수출한다고 보고, ② Wallerstein 등은 국가구조, 생산활동유형, 노동통제양식의 측면에서 중심부는 강한 국가, 자본·기술집약적 생산활동,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노동통제양식을 보이는 테 비하여, 주변부는 취약한 국가, 노동집약적 생산활동, 억압적 노동통제의 특징을 보인다고 본다.⁴⁵⁾ 한편 반주변부는 양자의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세계체제론에 의하면 중심부-주변부 분할은 중심부국가들이 전체제의 여러 기능을 자신의 필요에 알맞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지속된다. 중심부국가들은 의도적으로 주변부국가들을 약화시키거나, 정복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기도 하고 독점적 제한을 가하여 자신의 산업을 보호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주변부의 보호정책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제기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⁴⁶⁾

이 세 지역들이 세계경제로부터 받는 혜택은 각기 상이하며, 중심부 지역으로 경제적 잉여가 불균형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더욱이 각 지역의 경제구조는 세계경제 지향적인 기득권을 지닌 지배계급과 이 계급의 이익권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중심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주변부에서 가장 약한 국가이다)를 지탱해 준다. 한편 자본주의 세계경제 안의 다양한 국가군에 있어서 권력의 상이성은 체계전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강력한 국가는 중심부 지역으로 잉여가 이동하는 것을 강화·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강력한 국가들이 자국의 자본가계급에게 경제외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세계시장의 무역조건을 조작·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45) 예컨대 서유럽은 제조업과 낙농업부문을 특화하였는데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을 요하며 비교적 임금이 높은 자유임금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회구조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비교적 강력한 국가, 즉 ‘중심’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남미와 발트해 연안의 동유럽은 상대적으로 낮은 숙련을 요하는 분야(광업과 곡물)에 특화하였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국가간섭을 통한 강제노동의 형태를 택했고 제조업자들과 1차산품수출자간에 이해의 차이가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이 국가들은 약소국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부에 의해 쉽사리 정복되었다는 것이다.

46) Wallerstein의 이런 관점은 패권안정이론과 흡사한 바가 있다(1980: 38-39). 신맑시스트인 Fred Block(1977)도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다.⁴⁷⁾

참고문헌

- 신옥희. 1995.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 김달중 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서울: 나남).
- 윤영관. 1996. “패권국가와 국제정치경제질서,” 윤영관,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서울: 민음사).
- 이수훈. 1991. “세계체제론의 형성: 이론과 방법론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수훈 외. 1991.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Aaron, Raymond. 1973.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Garden City, N.Y.: Doubleday).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_____. and Robert O. Keohane. 1985.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vol. 38(October).
- Block, Fred. 1977. *The Origins of International Economic Disor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ewer, Anthony. 1980.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A Critical Surve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Carr, Edward H.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Torchbooks).

47) 이와 관련하여 Wallerstein은 중심-위성 (metropole-satellite) 관계의 비유는 역사적 발전을 형성해 온 특정한 관계 및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인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본다. 사회체제의 외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본발전의 상이한 단계나 자본유형의 특정한 외형, 또는 자본과 노동사이에서 유발되는 특정 계급구조 및 갈등을 분별해 낼 수 없게 되고, 또한 이것은 부동가교환을 통하여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한다든가, 중심이 잉여를 전유한다는 식의 극히 추상적인 주장만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심부의 내적인 자본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다시 금융자본으로) 중심부의 자본들의 관계도 불안정한 경쟁상태에 있고, 생산의 사회적 관계 자체도 계속 새로운 요구와 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 Conybeare, John A. C. 1984. "Public Goods, Prisoners' Dilemma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8 (March).
- Cooper, Richard C. 1972.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Foreign Policy in the Seventies," *World Politics*, vol. 24 (January).
- Cowhey, Peter F. and Edward Long. 1983. "Testing Theories of Regime Change: Hegemonic Decline or Surplus Capac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2 (Spring).
- Gilpin, Robert. 1971.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ecial Issue, vol 25 (Summer).
- _____.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urevitch, Peter. 1978. "The Second Image Reserv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no. 4.
- Gramsci, Antonio.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Grieco, Joseph M. 1990. *Cooperation among Nations: Europe, America,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ume I (Beookfield: Edward Elgar).
- Gowa, Joanne. 1989a. "Rational Hegemons, Excludable Goods, and Small Groups: An Epitaph for Hegemonic Stability Theory?" *World Politics*, vol. XLI (April).
- _____. 1989b.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Free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 no. 4 (Dec.).
- Haas, Ernst B. 1964.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58.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68. "Technology, Pluralism, and the New Europe," in Joseph S. Nye, Jr.,

- (ed.), *International Regionalism* (Boston: Little, Brown).
- Heilbroner, Robert L. 1985. *The Nature and Logic of Capitalism* (New York: W.W. Norton).
- Ikenberry, G. John and Charles A. Kupchan. 1990. "Socailization and Hegemonic Pow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3 (Summer).
- Lindblom, Charles. 1977. *Politics and Markets: The World's Political-Economic Systems* (New York: Basic Books).
- Keohane, Robert O. 1980. "The Theroy of Hegemonic Stability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s, 1967-77," in Loe R. Holsti, R. M. Siverson and A. L. George (eds.),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Westview).
- _____.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and Joseph S. Nye, Jr (eds.), 1972. *Trans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and Joseph Nye, Jr.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Kindleberger, Charles. 1986.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asner, Stephen D. 1976.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 28.
- _____. 1979. "The Tokyo Round-Particularistic Interests and Prospects for Stability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International Studies Quarlerly*, vol. 23.
- _____. 1983.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ake, David A. 1984. "Beneath the Commerce of Nations: A Theory of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8.
- _____. 1991. "British and American Hegemony Compared: Lessons for the Current Era of Decline," in Michael Fry (ed.), *History, The White House and the Kremlin* (London: Pinter).
- Lenin, V. I. 1939[1917].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Lipson, Charles. 198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vol. 37 (October).

- McKeown, Timothy J. 1983.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d 19th Century Tariff Levels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7, no. 1 (Winter).
- Mitrany, David. 1966.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 Morgenthau, Hans J. 1946. *Scientific Man versus Power Politic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Morgenthau, Hans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Knopf).
- Nye, Joseph. 1971. "Comparing Common Markets: A Revised Neo-Functional Model," in Leon N. Lindberg and Stuart A. Scheingold, eds., *Regional Integration: Theory and Resear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World Politics*, vol. 40 (January).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ecrance, Richard. 1976. *America as an Ordinary Count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Ruggie, John Gerard. 1975.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 29, 3 (Summer).
- Russett, Bruce. 1985. "The Mysterious Case of Vanishing Hegemony; or Is Mark Twain Really Dea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2 (Spring).
- Snidal, Duncan. 1985. "The Limits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4 (Autumn).
- Stein, Arthur. 1983.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 Anarchic World, in Interdependence, and Externalization," *World Politics*, vol. 22, April 1970.
- Strange, Susan. 1987. "The Persistent Myth of Lost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4 (Autumn).
- Wallerstein, Immanuel. 1974a.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4b.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 _____. 1979. "A World-System Perspective on the Social Sciences,"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0. *The Modern World-System II: Mercantilism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1600-1750* (New York: Academic Press).
- Waltz, Kenneth. 1959.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 Yarbrough, Beth V. and Robert M. Yarbrough. 1987. "Cooperation in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fter Hegemony, W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1 (Winter).